

기고

강현옥

한국필터시험원 본부장



한국필터시험원(KFTL, Korea Filter Testing Laboratory)은 최근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부터 시험기관 인정 항목을 추가로 획득했다. 적용규격은 KS L ISO 9972, ISO 9972 등이다.

건축물 기밀도, 환기량 시험은 건축물 내·외부에 발생되는 공기의 유입 및 유출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이다. KS L ISO 9972는 건물의 기밀 성능 측정 및 팬 가압법 기밀 성능 시험기준은 2006년에 제정됐다.

이를 통해 건물의 불필요한 에너지 손실을 방지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과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한국필터시험원은 국내 원자력발전소 주거구역의 거주환경 거주성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다.

원천 내부 또는 주변의 거주성 평가를 통해 장기 거주에 필요한 환경조건(기밀성, 환기, 오염물질 차단 성능 등)을 과학적이고 엄격하게 검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다. 이런 오랜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근 시험기관 인정 항목을 확대하게 됐다.

블로워 도어 테스트(Blower Door Test)는 건물 출입

구에 특수 송풍장비를 설치해 인위적으로 압력을 조정하고 외부로 누출되는 공기량을 측정함으로써 건물의 기밀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블로워 도어 테스트는 건물의 기밀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고성능 단열 및 고기밀성 설계를 필수로 하는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패시브하우스, 제로에너지건축물 등)에서 매우 중요한 검증 절차다.

이 시험은 고성능 에너지 건물인 패시브하우스,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뿐만 아니라 원자력시설, 병원, 연구시설과 같이 고도의 기밀성을 요구하는 건물에도 적용된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명시된 ‘기밀성 창’, ‘기밀성 문’이라 함은 창 및 문으로서 한국산업규격(KS) F 2292 규정에 의해 기밀성 등급에 따른 기밀성이 1~5등급(통기량 5㎡/h·㎡ 미만) 인 것을 말한다.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이다.

에너지 건축물(Energy Efficient Building)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건축물을 의미한다. 에너지 건축물의 특징은 고성능 단열재를 사용하며 고기밀성 창호 및 문을 적용한다. 고효율 환기, 공조 시스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한 건축물이다.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실내 온도, 습도, 공기 질 등을 효율적으로 유

지하면서 난방, 냉방, 조명, 급탕 등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기술과 설계 기법이 적용된다.

패시브하우스란 독일에서 시작된 초고효율 건축물 인 중 개념으로 별도 난·냉방 시스템 없이도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집을 말한다. 패시브하우스의 핵심 요소는 강화된 단열(외벽, 지붕, 바닥 등)이다.

기밀성 높은 건물 외피(Air Tightness) 및 열회수형 환기장치(HRV, Heat Recovery Ventilator) 사용하고 일조를 극대화해 3중 유리창, Low-E 코팅 로 창호를 설계한다.

독일 패시브하우스처럼 난방에너지 사용량, 1차 에너지 사용량, 블로워 도어 테스트 결과에 따라 에너지 기준을 산정한다. 난방기나 에어컨 없이도 연중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 기존 건물 대비 에너지 사용량이 70~90% 감소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번 시험기관 인정 항목 확대로 국내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 시장을 지원하며 고성능 기밀성을 요구하는 건물의 품질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패시브하우스 및 ZEB 인증 건물 활성화 기여해 국내의 인정을 위한 필수 시험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지속 가능한 건축 및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지원하는 핵심 서비스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

청년 부양 사각지대, 연말정산 공제 기준 바꿔야

며, 부모는 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제도는 현대의 사회적 현실과 동떨어진 구조일 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의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을 가계가 전적으로 감당하게 만드는 구조적 불균형을 낳고 있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인구 감소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구조적 위기로 대두되고 있다.

저출산 해소와 가족 친화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개인과 가정에만 전가하는 기존 제도는 조속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한편, 청소년 기본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당 연령층이 여전히 국가의 보호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행 연말정산 인적공제 제도는 이 중 상당수를 배제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이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부모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현저히 부족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오늘날 자녀를 대학까지 진학시키고, 취업 전까지 경제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보편적인 가정의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만 20세라는 획일적 기준을 적용해, 가계의 현실적 부담을 외면하고 있다. 단순히 세법의 지침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식의 태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인구 감소에 직면하고 있다. 국가의 존속과 지속가능성까지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자녀를 책임지고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제도적 뒷받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인적공제 연령 기준의 상향 조정은 단순한 세제 개편이 아니라, 가족 친화적 국가를 향한 첫걸음이다.

우리는 이제 청년이 자녀 부양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맞는 세제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 청년을 위한 정책이려면 그들을 부양하는 부모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세대 간 연대이며, 사회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선언이기도 하다.

지금이야말로 낮은 기준을 버리고,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때다. 정부는 인적공제 제도의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 청년이 자녀를 부양하는 가계에 실질적인 조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저출산 시대에 정부가 부모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응답이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일 것이다.

독자투고

안전습관 실천으로 안전한 사회를

교통사고 현장을 보면 주의를 분산시키는 각종 행동 습관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화재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가스레인지에 조리기구를 올려놓고 이웃집에 잠깐 갔다가 조리 사실을 깜박 잊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접속시켜 과부하로 불이 난 경우, 튀김을 위해 식용유가 담긴 냄비 등에 불을 올려놓은 채 주방을 잠시간 떠나 발화가 일어난 경우, 난방기구 주변 가연 물질에 착화·발화된 경우 등 다양한 예기가 있다.

이처럼 교통사고나 화재는 실천하기 어렵지 않은 안전 습관만 지켜졌다면 발생하지 않을 사고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운전할 땐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등 운전에만 집중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화재 예방을 위해선 외출이나 수면 전 전기·가스·난방·전기기구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한다.

가정에서부터 직장까지 안전을 확인하는 습관, 운전 시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운전에만 집중하는 안전 습관을 들이는 세상이 되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 등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될 거로 생각한다.

한선근 고흥소방서 과학119안전센터 소방위

기고

이현창

전남도의원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 자녀와 부모 등 부양가족에 대한 책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연말정산 인적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 구성원을 부양하는 경우, 세금 감면을 통해 가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핵심적인 세제 장치로 자리 잡아 왔다.

특히 자녀와 같은 직계비속에 대한 인적공제는 부모의 실질적인 부양 현실을 반영해 가정경제의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현재 적용되고 있는 연령 기준은 이 제도가 도입된 초기와 달리, 급격히 변화한 사회·경제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가계경제는 자녀의 교육과 취업 준비기간 연장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74.1%에 달하고,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까지 평균 1~2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

이 기간 동안 많은 자녀들은 독립적인 소득 없이 부모의 지원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세법상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는 더 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취재수첩

광주FC, 성숙한 구단으로 거듭나길

송하중

문화체육부 기자



프로축구 광주FC가 최근 시끄럽다. 아쉬운 구단 운영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재무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프로축구 전 구단의 재정 상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광주FC의 재정건전화 제도 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광주는 2023년 약 150억원이었던 총수입이 2024년에는 약 214억원으로 64억원 증가했지만, 손익분기점을 넘지는 못했다.

결국 지난해 재정운영 결과 약 23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재정건전화 제도(손익분기점 지표)를 준수하지 못했다.

이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광주FC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상벌위원회를 오는 12일 개최하기로 했다.

재정건전화 제도 미준수로 상벌위에 회부된다면 선수 등록 제한, 벌금 부과, 승점 삭감 등 다양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특히 팀이 2부로 강등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다.

현재 광주는 아시아 관련 연대기여금 미납 사태 역시 진행 중이다. 지난달 21일 연대기여금과 벌금을 완납하면서 FIFA의 선수 등록 금지 절차는 해제됐다. 그러나 선수 등록 금지 기간인 지난 겨울 10명 이상의 선수를 등록해 출전시킨 징계 미준수에 관한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

광주는 올해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에서 역대 최다 득점 선수로 이름을 올렸지만, 또 광주와 함께 ACL에 진출했던 울산 HD와 포항스틸러스가 리그 스테이지에서 탈락한 가운데 광주가 유일하게 8강까지 진출하며 K리그의 자존심 또한 살렸다.

아시아 무대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광주가 조금 더 성숙한 운영을 발판 삼아 완벽한 시민구단의 표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OPINION

2025년 6월 10일 화요일

사설

광주시내버스 파업…솔로몬의 지혜 필요

노사협상에 난항을 겪어온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결국 파업을 재개했다고 한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이 9일 첫 차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노조 조합원은 1400여명으로 광주 시내버스 운전원(2400여명)의 58%가 넘는다.

노조는 지난 5일 전면파업에 나선 후 사측에 협상안을 요구하며 다음 날인 6일부터 파업을 일시 중단하고 준법 운영을 했다. 하지만 사측은 연휴 3일간 아무런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결국 다시 전면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이번 파업은 2014년 6월 파업이후 8일간 운행 차질을 빚은 이후 11년 만이다.

문제는 노사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파업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는 “도시 근로자 생활임금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며 올해 임단협에서 연봉 8.2% 인상, 65세로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광주 시내버스 일일 수용 인원이 2013년 41만명에서 지난해 28만명까지 줄어든데다 기름값 등 모든 원가가 올라 운송장자가 나고 있다”며 임금동결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광주시도 적극 개입해 중재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지난 2007년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 특성상 사업자의 적자를 보전해 줘야 돼 노조원 임금 인상이 광주시가 떠안아야 할 추가부담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도입 초 196억원이었던 준공영제 지원금은 2019년 733억원, 2020년 1189억원, 2022년 1393억원, 2024년 1422억원 등 매년 급증해 올해는 1402억원에 달해 당장 이마저도도 감당하기 벅하다.

서로의 주장만 한다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마땅한 해결책이 안보인다는 얘기다. 하지만 시내버스 파업은 단순한 노사 분쟁이 아닌 시민의 일상, 이동권, 공공의 책임이 걸린 중요한 문제다.

광주시내버스 노사와 광주시는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모두 다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하루 빨리 파업을 끝낼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가공식품·계란값 폭등…정부 물가 잡아야

서민들의 삶과 밀접한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됐다고 한다. 최근 6개월간 초콜릿, 커피, 빵, 라면 등 가공식품 10개 중 7개 이상의 품목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가공식품 74개 품목 중 계엄사태 직전인 지난해 11월 대비 물가지수가 상승한 품목은 53개나 됐다. 이는 전체의 72%를 차지하며 이중 6개월간 가격이 5% 이상 오른 품목 또한 19개나 된다고 한다. 오징어채가 31.9%로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 초콜릿 10.4%, 커피 8.2%, 양념 소스와 식초, 젓갈은 7% 넘게 올랐다. 또 햄·베이컨, 고추장, 생수는 6%, 아이스크림과 유산균, 냉동식품, 어묵은 5%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빵, 커피, 밀가루 등과 함께 정부가 중점 관리하는 식품인 라면도 업체들의 도미노 가격 인상으로 5% 가까이 올랐다. 이 때문에 가격이 2000원에 육박하는 라면 제품이 많아졌고 2000원 이상 제품도 등장했다고 한다.

이는 그동안 기업이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가격 인상을 자제해오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진 국정 혼란기를 틈타 제품 가격을 무더기로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계란값까지 치솟고 있다. 지난 4월 8개월 만에 상승한 데 이어 매달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는 물론 계란을 많이 사용하는 자영업자도 부담이 커진 것이다.

실제로 특란 30구 평균 소비자가는 한 달 전인 5월 4일 6946원에서 이달 4일 7028원으로 상승했다. 계란 가격이 7000원 선을 넘어선 것은 2021년 이후 4년 만이라고 한다.

문제는 이번 가공식품 가격의 일제 인상이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과거에도 국제 곡물 가격 급등이나, 환율 상승 등의 이유로 일부 기업이 가격을 인상한 적은 있었지만, 이처럼 동시다발적으로 가격을 오르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빵, 라면 등 필수 식료품 가격이 오르며 저소득층의 부담이 크게 심화된 데다 서민 가계의 밥상 물가 부담도 부쩍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민생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첫 걸음인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해줄길 바란다.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편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논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